

# 가출·실종자 가족 두 번 울리는 경찰

### 가족들 애타는데 '단순 가출' 소극 수사

### 업무지침 활용 않고 제멋대로 종결처리

#.정신지체 3급 이모(62)씨 누나(71)는 지난해 4월 8일 "가출한 남동생이 수개월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목포경찰에 신고했다.

이씨 누나는 신고 뒤 동생을 급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해가 가도록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애만 태웠다.

경찰은 이 기간 5월·11월 이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11월)한 것 외에 소계 파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 동생은 누나의 신고가 접수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10일 경찰·교육

노동부 등의 연전 인권 유린 실태 합동 점검 과정에서 발견돼 누나와 극적으로 만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출·실종자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초기 대응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귀가하지 않은 가출자를 제 멋대로 종결 처리하는가 하면, 실종을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수색 작업 등에 나서지 않아 피해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가출 등으로 신고 접

수된 인원은 모두 4810명으로 이중 454명(9.5%)이 아직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2년 5127명 중 204명(4%)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미발견자로 분류된 것을 고려하면 5.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관에게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일단 하거나 강도나 살인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몰두하느라 우선 순위에서 밀어놓는가 하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대부분 기초수사 종료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 수사를 하는 형편이다.

광주광산경찰의 경우 지난 8일 김모(57)씨 남편(73)에 대한 가출 신고를 접수 받은 뒤에도 단순 가출로 판단, 소극적 수사를 진행하다 가족들

이 SNS 등을 통해 '실종자 남편 찾기'에 나서면서 범죄 연관성 등을 고려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수사와 관련된 업무 지침'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가출 신고의 경우 신고 24시간 이후 해당 경찰서 실종수사전담팀 등으로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좀 더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목격자 찾기에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동부 경찰의 지체장애인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도 부인의 가출 신고를 접수받은 익산 경찰이 귀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허술한 수사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익산경찰은 지난달 8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아내가 가출했다는 남편(46)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가출 신고가 잦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주일 만에 종결처리했다. 아내는 정모(3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3명의 괴압에 넘어가 집을 나섰다가 성폭행까지 당한 뒤 남편에게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자 전담수사팀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강조해온 방침이 '헛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출전담인력이 한 두 명인 곳도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겨울 미나리 수확 한창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미나리 재배농민들이 겨울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부림사건' 재심청구 5명 무죄 '변호인' 33년만에 승소

### 부산지법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합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희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수사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당시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정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유서 대필' 강기훈씨 22년만에 무죄

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청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강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관련선거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바우처 카드'로 보조금 수천만원 챙겨

### 광주지검 공안부

광주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종진)는 13일 오후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공무원의 자택 등 2~3곳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시 공무원 2명을 12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광주시장 선거 유력 경쟁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경찰 10명 입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처'란 일종의 상품권으로 정부가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해 저소득층이 복지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대여해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광주 A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박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회 관계자인 박씨 등은 지난해 3~8월 김모(39·여)씨 등 79명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청구,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권 대여 사실을 숨기려 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타년 보조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경찰은 이용권을 부당하게 대여한 김씨 등은 형편이 어렵고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매달 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일부 자부담(2만원)만 내면 제공기관에서 운동, 건강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까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담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